

김병기 전격 사퇴에 차기 與 원내사령탑 주목

박정·백혜련·한병도 의원 등 준비
'5개월' 임기에 출마 신중 기류
경선시 최고위원 선거 겹쳐 관심
"분위기 추슬러야" 추대론도 솔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각종 비위 의혹으로 30일 전격 사퇴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를 이끌 집권여당 원내 수장이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당초 내년 6월이었던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예기치 못한 사태로 조기에 치러지게 되면서 당내 경쟁도 일찌감치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다음 달 11일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등 여권 내 권력 지형 문제와 맞물리면서 원내사령탑 선거전의 의미가 좀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보궐선거로 당선된 원내대표의 경우 남은 임기만 수행한다는 점에서 관리형 인사가 추대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당헌에서 원내대표 과정에 시 1개월 이내 보궐선거를 열고 차기 원내대표를 뽑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 원내대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초 보선을 통해 뽑히는 새 원내대표는 내년 6월까지 약 5개월간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새 수장이 선출되기 전엔 당헌에 따라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행하게 된다.

문진석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후임 선출과 관련, "당헌·당규대로 하면 된다"며 "적혀있는 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박정·백혜련·한병도(이상 3선·가나다순) 의원이 주변 의원과 접촉하며 출마를 준비해왔다.

3명 모두 '친명'(친이재명) 계이지만, 정치 성

향이나 노선에서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박정어학원 원장 출신인 박 의원은 지난 8·2 전당 대회 때 정청래 대표와 경쟁했던 박찬대 의원의 선거를 적극적으로 도왔다.

계파적 성향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 백 의원은 2011년 검찰 수사의 중립성 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검사직을 사직한 뒤 이듬해 총선 때 민주당에 영입됐다.

원광대 총학생회장을 지난 586 운동권 출신인 한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정무수석 등을 지내 당시 친문계 핵심 인사로 분류됐다.

당내에서는 현 정청래 지도부의 사무총장인 조승래 의원(3선), 이른바 1인1표제 때 정 대표와 각을 세운 이언주 최고위원(3선)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만약 이들 간 대결이 성사될 경우 최고위원 보선과 맞물리면서 정청래 지도부 변화의 진폭을 키울 수 있다. 여권의 일부 지지층이 정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가운데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대결 구도로 최고위원 선거가 진행되는 양상 속에서 원내대표 보선 역시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5개월짜리 '반쪽' 원내대표인 데다, 원내대표의 주요 임무인 정기국회 및 예산안 처리가 끝났다는 시점도 변수로 꼽힌다.

내년부터 여의도가 6·3 지방선거 대비 체제로 빠르게 전환될 예정이기 때문에 원내대표의 활동 공간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당내 일각에선 결국 관리형 원내대표를 추대하는 방식으로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는 김 전 원내대표의 사퇴로 당이 어수선해진 상황에서 경선을 진행하기보다 의원들의 의총의를 모으는 게 낫다는 말도 들린다.

한 중진 의원은 "다시 경선하고, 서로 경쟁하고 그럴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며 "당내 분위기를 추스르면서 경선이 아니라 추대하는 방식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내란재판부법·정통망법 통과

李대통령, 청와대서 첫 국무회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특례법 공포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취임 후 국무회의가 청와대서 열린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특례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내란·외환 등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각 2개 이상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주된 쟁점이었던 재판부 구성 방식은 각 법원이 판사회의·사무 분담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담당 판사를 지정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 법안의 효력은 공포 즉시 발생한다.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은 이른바 '허위조작정 보근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불법 및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며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를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연합뉴스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 30일 국회 본회의 산회를 앞두고 의원들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개호 '민생의료 패키지법' 2건 대표발의

보건소 등 시설 개선·의료인프라 확충

"농어촌지역 주민 생명·건강권 지켜야"

무너져가는 지방 의료 체계를 바로 세우고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은 30일 "보건소 등 농어촌 보건기관의 시설 개선과 지역 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도시와 농촌 간 의료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보건소 등 보건기관의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는

핵심 국가사업이다.

그러나 최근 해당 사업들의 집행률을 살펴보면 시설 개선 사업 40.6%, 신증축 사업 34.3%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는 현행법상 관련 예산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지역자율계정'으로 한정돼 있어 자체의 포괄적 예산 구조 속에서 우선순위에 밀려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개정안은 지역자율계정으로 한정됐던 전출금 범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체로 확대해 재원이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에서 고르게 배분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함께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직접 지원하는 '지역지원계정' 세출 항목에 의료 취약지역의 응급의료체계 구축, 지역 의료인력·의료기관 육성·확충 사업 등을 명시했다.

이개호 의원은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는 가장 치명적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의료 공백"이라며 "보건소 신축 예산조차 제때 집행되지 못하고 뒷전으로 밀리는 현재의 예산 구조로는 농어촌 주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패키지 법안이 통과되면 농어촌 보건소 현대화는 물론, 응급의료체계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 지원이 한층 촘촘해질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디에 살든 차별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5·18 위자료 불균형 해소 기준표 마련

박근택 '5·18보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 신설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박근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은 30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보상

배까지 차이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 최소한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개정안에는 박 의원이 관련 판결문 상당수를 참고·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보상금 기준표를 함께 제안해 주목된다. 향후 국회 본회의 통과 시 5·18 관련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합리적 보상의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김진수기자



심의번호
220603-중-139779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